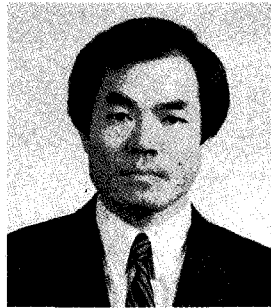


# 낙농육우산업 안정을 위한 협회의 대응활동



김 인 식

본회 조직지도부 부장

낙농육우산업이 전환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우유소비감소와 분유재고적체현상은 성수기에도 해결기미가 없는가 하면 값싼 모조분유 수입이 예상대로 확대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330만원대에 육박하던 소값이 250만원대로 곤두박질치자 그동안 느긋하던 한우농가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이다.

분유수입이나 우유수급문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소값 역시 현재 수준에서 대폭적인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UR협상이 있은후 최근까지만 해도 농가도 전문가도 개방이 큰 문제없다는 식의 안도감 갖는 이야기들이 오갔었다. 특히 낙농은 경쟁력에 있어 자신감 있다는 식의 반응들이 많았다. 정부 역시 UR협상에 있어 분유의 경우에만 수입시 22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정도로 하였고, 타제품은 8내지 40%정도의 관세로 수입이 자유화 되도록 한데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

다. 당시 일본의 협상결과를 제시하면서 최소한 일본의 예가 관철되도록 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었다.

일본은 35% 전후의 관세율에다 적정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령 모조분유로 지칭되는 「우유합유조제품」(1901-90)의 경우 관세 35%에다 무려 1,363엔의 부과금(mark-up)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과금을 높게 책정하여 사실상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대비한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모조분유 수입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소값은 한우전반의 경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소값이 높다면 다른 어떤 요인에도 우선하여 농가 사육열기가 고조된다. 올연초까지 소값은 계속 안정추세로 상승하였다. 지난해에는 쇠고기 수입쿼터를 2만톤이나 초과하여 수입할 정도였고, 그래도 큰 소리없이 조용한 것은 소값이 높아 문제제기할 겨를조차 없었던 분위기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만큼 한우농가 관심의 초점은 소값에 집중되어

##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있다고 본다.

호당 평균사육두수가 5두정도에 불과하고 부업농위주 사육체계에서 소값이 거의 전적으로 사육심리를 좌우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광우병파문과 쇠고기 소비감소, 4월 총선의 기대심리 와해 등으로 소값은 갑작스런 폭락의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의 500kg 한우 숫소기준으로 250만원선 지지를 목표로 수매정책이 시작되었고 생체 kg당 5천원선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유체화와 소값하락 국면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이 안정된 기반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돌출되는 여러변수와 낙농육우산업전반의 부딪히는 과제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본다. 주요한 내용만을 간략히 소개코자 한다.

### 낙농제도 개선위 참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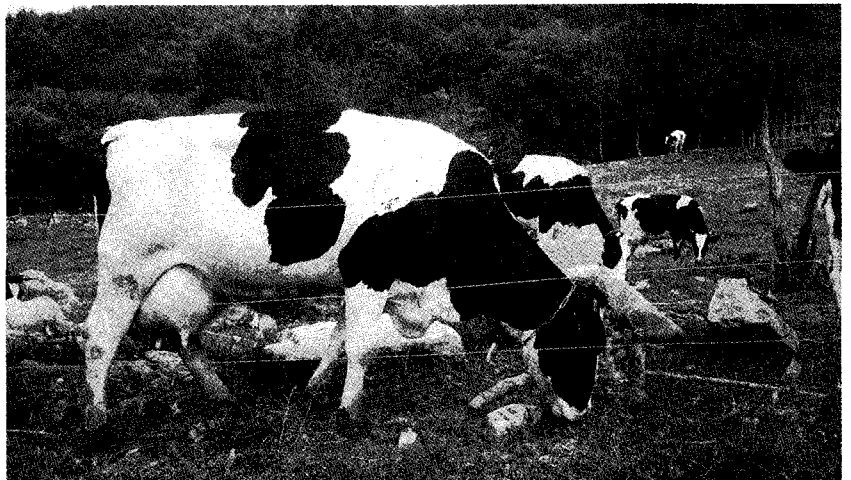
낙농업의 제반 과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책 방안은 십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었다. 특히 집유제도의 개선과 원유검사제도의 개선, 우유수급조절을 위한 기구 마련등의 과제는 수없이 되풀이 되는 논의를 반복해 왔었다. 14대 국회에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에다 그 내용을 함축시켜 국회상정이 되어 정부·여당의 협의과정을 거쳤고, 국회 농수산위에서 논란만 거듭하다 법안개정은 무위로 끝나게 되었다.

제도개선은 요구되고 제도개선을 담은 낙농법개정은 되지 않고 낙농가의 찬반논란에 따른 갈등만 심화되는 데다 모조분유는 쏟아져 들어와 국내 분유체화 상태는 창고가 부족할 지경으로 이어지는, 어찌보면 내우 외환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낙농 현안의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됨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다 「낙농제도 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김현욱 교수를 위원장으로한 낙농관련 분야 16명의 낙농제도개선 위원과 35명 위원으로 구성된 3개의 분과 위원회가 운영되어 낙농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대안제시가 있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제도개선위원으로 김남용회장이, 분과위에는 김인식부장이 참여하였고, 실무 집행을 맡은 사무국에는 오인세 과장이 참여하였다. 분과위는 목장운영개선위, 집유제도개선위, 품질유통관리개선위로 분리하여 전문적인 논의를 거쳤는데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주로 제도개선 분야에서 우유수급조정기구설치문제와 집유제도개선, 자조금제도 마련 등 시급한 낙농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있어서 관심 역시 고조되었다. 최종적인 회의를 거쳐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건의안의 주된 내용은 더좋은 우유공급대책 마련 고품질원유생산과 유제품 가격경쟁력제고 유도방안 마련, 유통구조개선, 소비자 교육 및 홍보대책, 낙농여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목장이전을 위한 금융 세계 지원의 강화, 관세부과세의 체계개선, 조사료의 안정



적인 공급대책 마련, 독립적인 낙농전문기구설치, 낙농기술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주된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낙농관련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의 내용을 기본으로하여 제도개선 자료 및 정책 입안자료로 삼을 것으로 본다. 물론 그동안 낙농가의 숙원과제인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와 의견제외가 있었고, 향후 법개정예까지 연결지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모조 분유 수입 억제 활동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분유재고가 누증되어 1만5천톤이 체화되는 사건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선, 낙농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아무리 국내 사정을 내세워 어려움을 호소한다해도 식품업체들이 값싼 모조분유 수입에 의존하는 한 우리 낙농업계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수입자유화되어 있고, 모조분유수입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데다 관세와 제경비를 포함해도 2천원대 가격이기 때문이다. 국내 분유제조 원가가 6천원대이고 보면 값싼 모조분유를 원료로 수입에 치중하여 영리를 노리는 식품업체들의 수입행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수입억제를 위한 대책마련에 bus심하였고, 여러 경로로 수입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특히 분유 생산자이전 수용자인 유업체에 대한 수입 자제요청은 우리 낙농산업에 있어 공존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하였다. 물론 식품업체들이 스스로 수입을 자제할리 만무하다.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언론에 대한 여론조성과 도덕성 문제를 홍보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래도 자제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를 논의하였다.

국산원료 분유나 원료로 제품가격을 정하고 값싼 수입 모조분유를 사용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응징이 없이는 수입을 자제하기는 어렵다

는 판단에서와 그럴경우 우유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자칫 우리 스스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루기로 하였다.

모조분유 수입급증으로 인해 낙농업계는 분유체화가 심화되자 주로 영세 낙협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재고분유는 쌓여가고 기한은 도래되고 그냥두면 유효기한 만기로 버릴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값을 낮추어서라도 판로를 찾아 수소문하는 등 전전공공하고 있다. 자체 제품 생산으로 주로 시유나 발효유에 치중하는 영세조합들은 재고가 쌓이는 만큼 적자로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모조분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길 밖에 없다.

가령 모조분유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분유」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세도 분유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무역위원회가 주최한 모조분유 산업피해 구제신청 공청회에 참가하여 모조분유 수입의 부당성에 대해 사례 그리고 제도적 대책을 제시하였고,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가공업무의 일원화 추진 활동

유가공의 업무와 쇠고기 판매 유통업무등 낙농육우산업 관련 가공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가공업무 뿐만 아니라 위생관련 업무 역시 복지부 소관이다. 물론 양돈, 양계 등 축산물 전반의 가공업무가 마찬가지이다.

이 가공업무가 85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래 즐기치게 이의 환원을 주장하고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농림부로 환원을 요청하고 있다. 낙농육우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이 요구하는 숙원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관될 당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거니와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야 할 당위성 역시 설득력이 약하여 줄곧 건의해온 사안이지만 아직도 결실이 없다.

우선, 지난해 우유사건만 해도 업무 분산에 근본원

## 낙농우유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인이 있다고 본다. 가령 우유유통 전반의 업무를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다면 11월21일의 잔류물질 발표파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잔류물질이 낙농선진국 수준이하로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발표하여 마치 우유는 못먹는 식품인양 소비자가 오인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우유회사가 문을 닫는 운명까지 겪었다. 결국 발표파문으로 막대한 낙농피해가 있었지만 복지부의 대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최근의 O-157대장균이 소간에서 발견되었다는 발표역시 그러한 피해의 한사례이다. 역학조사 등 사실적 확인조사과정은 생략된채 보건복지부의 단순한 발표로 인해 소산업은 일방적인 피해만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난다. 지난해 탄저병 사건이나 수입쇠고기 농약오염사건파문등의 건에서 복지부 때문에 낙농우유산업이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에 가공업무의 농림수산부 일원화추진을 위해 협회가 앞장서 활동하였다. 우선 양돈, 양계협회와 농민단체협회 및 축협중앙회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일원화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전단지작 배포, 소비자 단체

의 동의를 구하는 방문활동, 대정부건의, 국회건의, 각 정당에서의 건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 청와대 농림수산수석과의 간담회, 15대농장공약사항 채택건의, 국회농림수산의원들에게 건의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특히 행정쇄신위에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였다. 4월 24일 행쇄위 실무회의에서는 거의 모든 위원들이 축산물가공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위원적축활동을 추진하였다. 수급과 연계한 가공업무의 일원적 관리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유도하였고, 특히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은 생산농가 단계에서부터 사양, 위생적관리, 사료급여, 개체관리 투약방법등에 있어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됨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전문야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행쇄위 본회의는 곧 있게 될것이고 우리의 목적달성이 있기까지 앞서 노력할 계획이다.

### 체회분유 소진 대책활동

분유체회가 심각해지자 협회에서 가장 고심하면서 추진한 것이 어떻게 하면 재고를 최소화 하느냐, 재고분유의 판로를 개척하느냐 였다.

우선 소비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재고 누적을 최소화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 소비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기관의 공식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등의 접대용 음료를 우유로하여 우유소비에 대한 경각심 조성파 체화의 어려움을 부각시킬것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유업체들의 공동소비홍보가 그 어느때보다 이쉬운 시점에서 자구대책인 업계의 공동홍보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누누히 지적하였다.

우리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소비선전 열기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홍보 리후렛과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우리 우유의 우수성과 소진을 위해 국민우유마시기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또 소비자단체의 협조 및 호응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키로 하고 주요 여성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를 가져



왔다.

특히 초등학교 우유 급식담당 선생님들과 소비자 단체들의 시청각 자료 제작요청에 비디오를 제작하여 보급키로 하고 재원지원 요청을 정부에 건의하여 동참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4월 성수기 이후에도 분유는 계속 쌓이고 창고마다 만원사태가 속출함으로써 낙농위기가 감도는 분위기로 계속 이어졌다. 이에 협회에서는 식품업체들의 모조분유 수입중단 요청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소진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우선 TV방송사에 요청하여 우유문제를 다루도록 유도하고 연합통신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도 우유 소비촉진 및 재고분유 소진대책을 보도하도록 활동하였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주요 요로에 재고분유의 손실 차액지원을 요청하는 건의 활동을 하였다. 분유 kg당 제조원가를 5,700원으로 하여 시중판매가 3,800원과의 차액 1,9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5천톤 정도 물량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지원 혹은 구매대상을 낙협위주 그리고 수입 모조분유를 사용하지 않는 유업체 위주로 하여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남한은 분유가 남아 어려운 반면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굶어 탈출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이때는 분유의 북한 지원은 좋은 남북교역의 길을 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벼짚과 옥수수 건초가 있어 적절한 가격으로 교역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분유 판매가 손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경로로 여론을 환기 시키고 있다.

### 한우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축산업의 기본축종인 한우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축산업을 지키는 가장 큰 대응책이 아닐 수 없다. 불과 4년후면 외국

산 수입육이 자유롭게 그것도 어떤 제한도 없이 수입될 때에도 과연 현재와 같이 안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이다. 물론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도 있긴 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일치하고 있다.

물론 우리 한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고유의 우수한 소이기에 국민들이 사랑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화가 이어지도록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체제상 한국에서 생산되는 소는 전부가 한우로 둔갑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고, 외국의 고급 냉장육 수입에 대비한 우리의 자신 있는 대응책을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 한우의 생산기반이 소값의 등락이나 경기변동 등 변수 발생에 대응하여 확고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것이 한우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실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촉발기금 조성에 기여한 수입 부과금의 대부분은 한우산업 안정과 육성기금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단지 한우가격 안정이라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에 묻혀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한우관련 제반문제의 파악과 바람직한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실감하고 「한우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학계, 행정, 연구기관, 농가대표, 단체대표 등 한우에 애정을 가진 전



# 특집

##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현안문제를 다루고, 적절한 대안을 도출시켜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28일 1차 모임에서는 현안인 절박도축의 문제를 다루었다. 지난 6월 절박도축을 가장한 죽은 소 도축파문이 언론에 도배질되고 난 이후 절박도축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난산, 급성고착증, 부상, 산욕마비 등으로 인한 사고성 소에 대한 절박도축이 사실상 도축장에서 기피하고 있어 소사육 농가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아예 도축장이 지 않고 소를 땅에 묻는 사례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농림수산부 담당과장인 배상호 가축위생과장이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하였다.

정부의 소각장 건설, 보험제도 실시등의 구상에 대해 현재 도축장의 기피현상에 대한 감독철저와 가축사료용 가공시설 설치로 절박도축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차기모임은 11월중에 도체등급제확대 실시방안과 관련하여 토론을 갖기로 하였다. 이렇듯 한우 문제에 대해 전문적 의견개진과 새로운 대안제시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물론 한우 농가들의 관심이 재고되도록하며 우리의 한우가 반드시 지켜지고 발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낙농육우산업 전반의 대변활동

낙농육우산업관련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당연히 주도적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월의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올해 사업계획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유소비홍보 및 분유 소진을 위해 협회장 주도로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으로 우유제품 원산지표기의무화를 건의하고 국산분유 사용권장을 요청하였고, 신한국당등 주요정당에 건의활동, 낙농가와의 대화와 의

견수립을 위해 낙우회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있다. 7월부터 실시된 체세포 및 세균수 기준 강화에 있어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정부와 수차의 교섭을 벌였다. 소 전산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 발급제도의 문제점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값 안정을 위해 수입육 방출문제, 지속적인 수매 대책 등을 촉구하고, 한우산업 평가모임을 농경연등과 협의하여 추진하였다.

농민단체의 공동연대활동에는 전국농민단체협의회와 연대하여 장관간담회 개최, 정당대표 등 정치권과의 대화, 청와대 농수산수석과의 간담회 개최, 농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협의 등으로 공동의 힘이 발휘되도록 하고 있다.

언론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가급적 낙농육우산업의 문제해결이 용이하게 되도록 홍보하고 있다. KBS, 라디오에는 협회장과 직원이 단골 출연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 아침 「밝아 오는 새아침」 프로에는 고정출연하고 있다.

긴급한 사안에 있어 사회적 여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합사료부가세 적용, 소값 파동, 우유파동, 절박도축 보도파문, O-157 발표파문, 배합사료인상문제 등에 대한 성명 등이 그것이다.

축산관련단체의 단합과 연대활동을 통해 축산업의 안정발전에 기여하고자 30개 단체가 한시적으로 뭉쳐진 「축산발전대책협회」 실무를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협회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산학협동을 통해 확산발전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한국축산학회 사무실을 협회내에 두고 있다.

협회는 2개월에 1회의 이사회를 통해 전국 낙농육우농가의 의사수령 및 협의 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고 목표실현이 있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회원의 질책과 성원속에서 달성되도록 매진하고자 한다. ☺